

8월 18일, 쌍용차 해고자 복직 바라는 시민 모인다

7일, 쌍용차 범대위 ‘대한민국 정부는 사과하라’ 기자회견 ... “문재인 대통령, 쌍용차 노동자와 한 약속 지켜야”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이하 쌍용차 범대위)가 5년 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쌍용차 범대위는 8월 7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사과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노동자를 향한 국가 폭력과 사법 농단의 폐해를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쌍용차 범대위는 쌍용차 문제 해결을 바라는 시민의 뜻을 모아 8월 18일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회’ 를 연다고 예고했다.

쌍용차 범대위는 ▲2009년 쌍용차 회계 조작 의혹 국정조사 ▲2009년 쌍용차-경기경철청 공모 파업유도, 노조파괴 사건 국정조사, 특검 도입 ▲쌍용차 살인진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쌍용차 사태 관련 구속·수배·벌금 등 형사 처벌자 사면 복권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대법원 쌍용차 재판 거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법 농단 특별법 제정,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재심 ▲쌍용차 희생자 가족 지원 방안 마련 ▲쌍용

차 해고자 전원 복직 ▲정리해고 폐지 등 10대 요구사항을 문재인 정부에 제시했다.

쌍용차 범대위는 금속노조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19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과 국가 폭력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만든 단체다.

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사측은 2015년 12월 30일 해고자 150명 2017년까지 복직을 합의했지만, 아직 119명의 조합원이 공장밖에 남아있다. 복직을 기다리던 김주중 조합원이 생활고와 트라우마 등으로 목숨을 끊었다. 쌍용차는 복직 일정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건 소송도 남아있다.

김득중 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의 만남 이후 진전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진전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라며 “5년 만에 쌍용차 범대위가 다시 모이고 18일에 범국민대회를 연다. 대회

전에 쌍용차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 라고 소망을 밝혔다.

김득중 지부장은 “쌍용차와 경찰이 수면가스 진압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쌍용차는 위기대응을 위한 일상적인 준비였다고 한다”라며 “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이태호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국가가 위기에 몰린 노동자를 암 덩어리나 테러분자로 낙인찍었다. 복직 여부를 떠나 이 나라가 노동자에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인식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이태호 운영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국가 손해배상 청구를 풀고, 국가가 쌍용차에서 벌인 범죄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쌍용차 범대위 대표자들은 희생자 30명의 이름을 부르며 30배를 올리는 상징의식을 거행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검찰,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범죄 5년 동안 방치

“왜, 재벌의 불법은 처벌하지 않나” ... 검찰 법무부령 무시, 노동부로부터 사건 받지 않아

노조가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불법 파견 범죄에 눈감은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고, 현대·기아자동차가 저지른 불법 파견 사건의 수사지연을 지시한 검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와 노조 현대·기아자동차 여섯 개 비정규직지회가 8월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범죄 비호한 검찰을 규탄한다. 정몽구와 검찰 책임자 처벌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8월 1일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을 내버려 두고, 부당하게 처리해 온 사실을 인정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이 사과하고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라고 권고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당연히 불법을 처벌해야 한다. 검찰은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검찰은 현대·기아차



의 불법 파견 행위를 과감하게 기소를 해야 한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 이상 유지하는 상시직업 업무는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법을 어기고 파견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검찰은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정몽구 회장의 수사를 3년 동안 내버려 두고, 불법파견을 합법 도급으로 전환하는 데 이바지했다.

정민기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차의 파견 노동은 14년 전 불법파견이라고 노동부 판정을 받았다. 노동부와 검찰

현대·기아차가 한통속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끌고 왔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검찰이 현대차그룹을 두둔해 손해배상청구와 해고로 고통받았다. 불법을 방관한 검찰관계자와 정몽구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검찰은 노동부의 수사지휘 건의를 막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라며 “금속법률원은 이번 사건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고,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에 따르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고소장을 받은 사건을 두 달 안에 수사 완료해야 한다. 검찰은 근로감독관이 수사지휘를 건의하면 7일 이내, 늦어도 14일 이내에 의견을 밝혀야 한다. 검찰은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의 경우 5년, 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은 3년 이상 지났지만 사건을 넘겨받지 않고 있다. 검찰이 규정대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 자본, 명백한 증거에도 노조파괴 부인

8일, 현대차 노조파괴 규탄 기자회견... 가로막는 용역, 보고만 있는 경찰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직접 기획하고 지휘했음을 확인하는 증거와 증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현대자동차에 노조파괴 증거에 대해 직접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자동차는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직접 개입했음을 입증하는 이메일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사와 상관없는 개인적 일’이라며 발뺌하고 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8월 8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사건 현대자동차 개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현대차 자본이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위해 청와대와 검찰, 노동부 등 가능한 모든 권력을 동원했다”라고 규탄했다.

지회는 기자회견에서 현대자동차가 “결품 우려 없는 안정 생산구조를 정착하지 못하면

납품구조 이원화 방침에 따라 주문량을 감축하겠다”라며 유성기업과 여러 부품사를 협박해 노조파괴를 사주했다고 폭로했다.

지회는 “갑을관계 개혁과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제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유성기업 노조파괴 같은 자본 범죄가 언제든 다시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